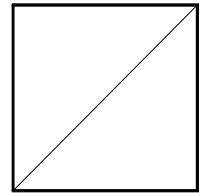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49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5. 11. (제 9 차)	

부산은행(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2. 5. 11.

1. 의결주문

부산은행(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산은행(주)(검사기간 : 2019.11.4. ~ 2019.12.13.)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3.25. 법률 제17112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4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49조,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8.5. 법률 제16930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신용정보법」'이라 함)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신용정보 관리의무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부산은행(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 및 '조치면제'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1>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제2항 및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 제9호 및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3.25. 대통령령 제31553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 (설명의무),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2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 제3항 제10호,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22]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 제29호
- 舊 「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및 제52조 (과태료) 제4항 제5호
-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2020.8.5. 대통령령 제30893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4]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및 제51조(과태료) 제1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3]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제21조(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및 제33조(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및 제5조의 2(행정처분) 제3항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질명의) 및 제4조의 2(실명거래의 확인 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별표3]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및 [별표3]

※ 관계 법규는 안건 (붙임 1) 참조

다. 관계부서 협의

-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2022.3.10.) 심의필
-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2022.4.6.) 심의필
- 제9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2.5.6.) 심의필

<별지>

부산은행(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부산은행 : 과태료 8,9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6,000만원)
나. 신용정보 관리의무 위반(900만원)
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2,000만원)
- 법적근거 : 舊「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제2항 및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 제9호 및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설명의무),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2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 제3항 제10호, 제390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 제29호
舊「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및 제52조(과태료) 제4항 제5호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4]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및 제51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제21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및 제33조(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 직원에 대한 조치

- ○○○지점장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하고 □□□부지점장 ■■■에 대하여 “조치면제”

－ 조치사유 :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 및 제5조의 2(행정 처분) 제3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질명의) 및 제4조의 2(실명거래의 확인 등)

2. 조치사유

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1) 영업점의 설명 확인의무 및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위반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자본시장법」 제108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운용자산)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 부산은행(주) △△△△△는 2018.5.10. ○○○○ 명의의 ☆☆ ☆☆☆ ABCP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좌 ♣건(가입금액 : ■억원) 개설시 명의인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명의인과의 유선 통화만으로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개인투자자 ○○○○이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지 않았고, ○○○○에게 (운용자산)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신용정보관리의무 위반

1)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 舊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부산은행(주) ●●●●●● 및 ○○○○○○는 2015.1.1. ~ 2019.9.24. 기간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던 ◇, ◇◇◇ 명의 개인채무보증정보 □, □□□건과 관련하여, 주채권이 대손상각되어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으나 별도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채무를 임의로 해제 등록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망분리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 부산은행은 2015.11.28. ~ 2019.12.13. 기간 중 내부 업무용시스템에서 다음지도 등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였고,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속*한 사실이 있음

* 총 ▲▲명의 임직원이 외부에서 원격으로 ■,■■■■회 접속

2) 공개용 웹서버 관리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 내에 이용자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도*

* 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관리

- 부산은행은 DMZ구간의 로그파일에 총 ♥♥♥,♥♥♥명의 이용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음

3)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계약관리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1조 제4호 및 제8호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운용하여야 하고,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부산은행은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시 계약이행 결과에 대한 검수, 대가의 지급, 납품지연 시 의무 등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 하였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추진한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검수기한을 미준수*하는 등 계약서 작성 기준대로 운용하지 않았고, 계약대상자가 납품을 지연하는 등으로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총 ★★★건으로 구축사업(▽▽▽건)의 ▶▶.▶%가 지연(검수기한 미준수 ○○○○건, 계약상대방의 납품기한 미준수 ■■건)

4) 이용자 및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사용자 및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부산은행은 카드, 회계 및 대행 업무를 위한 DB 테이블에 내부사용자 및 이용자 비밀번호 총 〰〰〰〰〰,〰〰〰〰〰*건을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음

* 1994년 ~ 1998년 발급된 현금카드의 1회용 비밀번호로 검사당시 未사용 테이블에 보관(검사기간 중 삭제 완료)

라.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 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의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의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 부산은행(주) △△△△△에서는 2018.5.10. ○○○○ 명의의 특정금전신탁 계좌 ♣건(가입금액 : ■억원) 개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유선상

으로 명의인의 계좌개설 의사만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 부산은행(주) ♠♠♠♠♠지점에서는 2018.5.10. ◆◆◆ 명의의 특정금전신탁 계좌 ♣건(가입금액 : 1억원) 개설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가족대리인(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관계 법규

1. 자본시장법 관련

☐ 舊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 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제47조 제2항(제52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삭제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 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설명 의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법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구조와 성격
2.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타. 법 제47조 제2항(법 제52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49조 제1항 제21호	6,000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③ 법 제108조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타. 삭제	삭제	삭제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 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5,000

2. 신용정보법 관련

□ 舊 「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제5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0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2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된다.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변경·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나.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변경 및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4항 제5호	1,000

3.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제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바. 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5,000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21조 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 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2. 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4. 그 밖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3.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금지(단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단,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4.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할 것(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 구축완료일자, 납품방법 및 대금지급방법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 작성 기준을 수립·운용할 것
8.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계약조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승인을 받을 것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지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비밀번호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나.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

제33조(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에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동 비밀번호를 조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의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사유·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금융실명법 관련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직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다. 감봉
- 라. 견책
- 마. 주의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단서 생략)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 금융위원회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제1장 금융실명제 업무기준

II. 금융거래 형태별 실명거래 방법

3. 대리인에 의한 거래

- 일반적인 대리의 경우 : 대리인(거래요청자)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함
- 가족에 의한 대리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하여야 함

5. 검사 및 제재 관련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여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 (1) 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 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 공통부문

I -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③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유형①	5천만원 이하	견책	주의 이하	주의 이하
	3억원 이하	감봉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유형②		주의 이하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

(단순절차 위반행위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조치 포함) 가능)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자산운용과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특수은행검사국 IT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52 02-2100-2664 02-2100-2975 02-2100-2621	02-3145-7202 02-3145-7334